

‘반쪽 청문회’ 된 축협 감사… 핵심 증인 빠지고 질타만 남아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홍명보 전 감독 사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등 불출석
운영 개선 논의보다 여야 공방만

30일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축협) 대상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망신주기식 질문과 핵심 증인의 불출석, 청문회 취지에 어긋난 발언이 나오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축협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몽규 전 축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출석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분류됐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와 박항서 전 축협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일부 참고인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사유로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불출석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지만 공론화장에 나와달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축협)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축협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 동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홍 전 감독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전 감독은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38억원 정도는 아니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은 임오경 민주당 의원의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면 이번 청문회가 열렸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 있어야 했을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청문회 도중 여야위원 간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이번 월드컵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이 없으면서 “우리가 (32강) 탈락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는데 이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많은 국민이 그런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전직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다’, ‘내 편 인사해서 그렇다’ (했는데) 이런 말씀이 그 상황에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인사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다. 그러면 결국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문화계 인사에 관해서도 말이 많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대한축구협회의 30년 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첫판부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맞받아쳤다.

또 ‘손흥민 미출전은 보복성이나’는 취지에 어긋난 질문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물 보충 휴식) 도중 이강인이 김진규 코치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김 코치에게 “손흥민, 이재성 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홍명보의 보복 차원인가”라고 물었다.

김 코치가 “그런 적 없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여기 국회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김 코치를 몰아세웠다.

최 의원은 “왜 이렇게 졸전을 벌였는가. 축구 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축구 팬들이 틀린 것이냐. 축구 팬들이 보고 있다”며 “왜 졌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코치가 “왜 이겼는지 졌는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하며 말을 이어 나가려 하자 최 의원은 “앉아라. 저런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 모양이다”라며 말을 끊었다.

이 가운데 홍 전 감독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두 선수가 선발로 나가지 않은 것은 전술적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칠레와 FTA 고도화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신산업 협력 확대 등 목표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칠레에 공식 방문을 명목으로 머물며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2004년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효된 한-칠레 FTA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칠레 FTA가 2004년부터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협정이 그 이후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칠레 양국이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

개하고, 협정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현대화가 단순히 무역 규범을 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1949년 한국을 최초로 인정한 남미 국가인 칠레와의 협정 현대화를 통해 노동 기준 및 성평등 등의 분야를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칠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광물 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특검 출범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여야가 30일 선관위 특검법(제9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여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쟁점 사안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외에도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여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다음달 10일 3차 청문회와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오후 3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표결에 붙여 재석 228인,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또한 국조특위에서 회부된 국조특위 활동 연장의 건도 재석 225인, 찬성 225표로 처리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2+2’ 회동을 갖고 선관위 특검법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수사인력을 특별검사보 5

명, 특별 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리기로 합의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90일의 수사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 사건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의혹이 발생한 이후 개표 중단·보조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 본격화

» 1면 ‘연금개혁·가상자산’서 계속

지난해 법안이 최초로 논의됐을 당시에는 2025년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정부 안 마련도 늦어지면서 입법이 늦춰졌다.

현재 여당이 최초 발의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0개 이상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된 법안은 아직 없다.

정치권에서는 기본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고, 입법 필요성에도 동의해준다. 지난해 입법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된 규제 권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도 좁혀졌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이후 후속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매출이 급감했는데, 법인 및 외국인 거래 허용이나 파생상품 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 논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이후로 예정돼 있어서다.

◆ ‘뜨거운 감자’ 된 ‘레버리지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한 파생상품 관련 논의도 주요한 화두다. 최근 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손실이 커진 투자자가 급증했는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정무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코스피 5000이 정부 정책 목표였고, 이를 달성했으면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대책은 이달 중순에야 발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존 1000만원 수준이었던) ETF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 같은데 (당국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시작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며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다.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요범죄 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맞게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박태홍 기자